

이덕일의 '역사의 창'



일장춘몽 지지율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은 '100년 정당, 20년 집권'을 내세웠다. 오만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2020년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163석의 단독 과반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17석을 주어 모두 180석의 거대 집권당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인 2021년 4월에 치러진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아주 달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은 39.18%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57.50%에 비해 18.32%나 뒤졌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춘 후보의 득표율은 34.4%로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득표율 62.67%에 비해 28.25%나 뒤졌다. 이런 추세는 지금껏 이어져 YTN의 의뢰로 실시한 11월 1주차(1일~5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9%의 지지율로 국민의힘의 46%에 비해 무려 20.1%가 뒤졌다.

민심의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지율이 뒤집어졌다. 왜 이런 현상이 일 어났을까?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실정 못지않게 민주당 정권의 오만한 자세가 영향을 미쳤다. 20년 집권은 1948년 이 땅에 한국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어느 정당도 겹치지 못한 길이였다.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이란 희한한 논리까지 동원해 가면서 종신 집권의 길로 나섰지만 4·19혁명으로 무

너지면서 12년 집권에 그쳤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의 5·16 군사 쿠데타와 1972년의 유신 쿠데타라는 두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18년 집권하고 무너졌다. 12·12와 5·17로 정권을 전할한 전두환의 신군부 일당도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후보의 집권 기간까지 합쳐도 14년 정도였다.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 염증이 나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20년 집권' 운운하는 오만은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

현 민주당의 뿌리가 친일 지지율의 집합체인 한민당, 즉 한국민주당이라는 사실은 눈외로 치자. 보다 중요한 것은 '촛불 민심'의 실천이라는 집권 명분의 길을 그동안 걸어 왔는가 하는 점에 있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은 민주당 정권이 촛불 민심을 '외면' 또는 '배신'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된 적폐인 식민사학, 즉 일본 극우파들의 황국사관(皇國史觀)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겪고 있는 일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가야사 복원만 봐도 그렇다. 여기에는 1조2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고가 집행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가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이데, 일본 극우파들의 성서인 '일본서기'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경남 합천을 '다라국', 전북 남원을 '기문국'이라면서 등재 신청했다. 한

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그 어느 사료에도 나오지 않는 이 소국명들은 모두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야마토왜(大和倭)가 369년부터 562년까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옹호하는 요소들이다.

가야사를 복원하겠다는 임나일본부사를 복원하는 이 기괴한 모습은 작금의 현상만이 아니라 현 정권 집권 후 식민사학자들이 제 세상 만만 듯 날뛰었던 '반춧발'의 연장선상에 있다. 현재도 역사운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정권은 '나의 길을 가려다'라는 듯 일축하고 있다. 이런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책임지는 당국자도 없다. 친일매국노들의 황국사관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가지고 가야사를 복원하라는 당연한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다가 민심 이반이라는 부메랑으로 내려오는 중이다.

촛불로 집권했다는 현 정권이 왜 이런 행보를 계속하는지는 풀기 힘든 수수께끼지만 현재의 상태를 고집하는 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현재의 뒤집어진 여론 지형을 일장춘몽으로 되돌리고 재집권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통절한 반성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첫 단추는 일본 극우파의 논리로 가야사를 복원하려는 현재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일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임플란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이원표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과장

심한 충치나 풍치 등에 의해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은 시간이 갈수록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GMI(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치과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미화 39억 달러로, 2025년까지 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 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 하향과 65세 이상에 대한 본인 부담률 축소(2018년 7월 기준 50%→30%)로 꾸준히 성장해, 2019년 기준 1만 명당 임플란트 식립률이 600명 수준으로 세계에서 압도적 1위인 상태이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 또한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심고 발생한 부작용 열 건 중 세 건이 임플란트 주위염

(peri-implantitis)일 정도로 사후 관리에 미흡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심어낸 끝'이라는 생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까지 파괴된 상태를 말한다. 즉, 자연 치아 주위에 생기는 풍치와 같은 질환이 임플란트에 발생한 것이다. 초기에는 임플란트를 감싸는 점막에만 염증이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peri-implant mucositis)으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도 적절한 구강 위생 관리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염증이 치조골까지 파급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난 5~20년간 유지된 임플란트의 28%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점막이 자연 치아의 잇몸과는 다른 해부학적 구조로 되어 있어, 염증이 발생하면 치조골까지 빠르게 파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연 치아는 풍치가 심해지면 발생하는 치아의 흔들림과 통증과 같은 불편감으로 환자분들이 되도록 빨리 치과에 내원하기 때문에 풍치가 초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임플란트는 감싸고 있는 치조골이 대부분 소실될 때까지도 동요나 통증 등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

는 경우 많아,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를 다시 뽑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대표적인 증상, 즉 임플란트 식립 부위가 빨갛게 붓거나 피나 고름이 나올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치과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법은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초기에 발견되면, 자연 치아의 스케일링과 같은 방식의 염증 제거 및 전신적·국소적 항생제 사용에 의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좋은 예후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증상 개선이 되지 않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수술적 방식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게 된다.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점막을 절개 후 거상하여, 염증으로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을 여러 가지 수술 기구 및 재료들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한다. 소실된 치조골 형태가 양호할 때는 골이식술이나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여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으면 자연 치아처럼 뽑아내야 하므로, 임플란트는 잘 심는 것만큼이나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은 환자의 경우 최소 3~6개월 간격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社說

'박빙 승부' 최대 관건은 호남 표 결집 여부다

118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역대 대선을 보면 호남 표심의 결집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린 경우가 적지 않아 여야 모두 호남 민심의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선 중 득표율 3%포인트 안팎에서 승부가 결정된 사례는 모두 세 번 있었다. 제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0.27%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38.74%)를 1.53%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당시 김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있었지만 광주 97.28%, 전남 94.61%, 전북 92.28% 등 호남에서 90%대의 압도적 득표율로 3~4%대로 저조했다.

16대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48.91%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2.33%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노

후보 역시 호남에서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18대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1.55%를 얻어 민주당 함당 문재인 후보를 3.53%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박 후보는 보수정당 후보 최초로 전남 10%, 전북 13.22% 등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데 비해 문 후보는 전남 89.28%, 전북 86.25% 등 앞선 대선보다 저조했다.

결론적으로 초박빙 대결로 전개된 역대 대선에서는 호남 표심의 결집 여부가 승부를 가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이번 대선에 적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90%대의 압도적 득표를 해야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10%를 넘기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호남 표심은 향우들이 많이 있는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호남 민심 집기 경쟁에 나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보다 진정성 있게 호남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적극 발굴해야 하는 이

우다. 호남 표심을 2.33%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노

아동학대 예방 위한 인력·시설 확충 서둘러야

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3세 임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3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에서 입양아 정인 양이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 수사원의 조사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아동학대법 강화'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 결과 일명 '정인야말'(아동학대법외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 지역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 경찰관(APO) 수가 광주 16명, 전남 37명 등으

로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전남 전체 아동학대 사건(광주 541건, 전남 635건)을 산술적으로 따져 보면 학대 예방 경찰관 한 명당 광주는 33.8건, 전남은 17.1건을 담당해야 한다. 수사뿐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매월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는 모니터링조차 힘겨운 현실이다.

여기에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일시보호 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광주에 두 곳, 전남에 아홉 곳뿐이다. 따라서 아동 학대 예방 인력과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아울러 주변에 학대 받는 아동은 없는지 전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선제적인 보호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야경국가'(夜警國家)는 18~19세기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초기 국가 형태다. 당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외교·치안 등 질서 유지 임무만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1776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이 점차 줄어들

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세기 남짓 지난 1900년대 초반이다. 스미스의 이론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했는데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가의 제안

시장의 실패는 어찌 보면 당연했다. 1929년 경제대공황은 무질제한 시장경제가 근본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이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채택한 뉴딜 정책과 그 이론적 근거가 된 케인스학파의 경제이론인 '수정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의 역할이 주목을 받게 됐다.

경제 부문에서 정부의 기능은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공급 재자이면서 동시에 조세 등을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이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수호하는 집행정치는 의미다. 또 경기 침체나 경기 과열 시에는 직접 주체로 나서 정책을 통해 이를 타개한다. 빈부 양극화와 물질 만능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영양 출신으로 이제는 전국에 체인점을 돌 정도로 성공한 와이마트 김성진 회장을 최근 만났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직원 임금 보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이 복지수준 탓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피하고, 높은 이직률로 기술·노하우 전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임금이 정부 지원으로 대기업 수준에 조금이라도 다가간다면, 일자리 시장에 생기가 돌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제 막이 오른 내년 대선을 위해 캠프 구성이 한창이다. 책상에 앉아 이론만 보는 사람보다 현장을 잘 아는 기업가나 활동가들이 정책 구상과 수립 과정에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기 고

희망을 품는 '농업인의 날' 고대한다



박안수
전 농협총장군지부장·경제학박사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다. 농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제정됐다. 1996년 처음으로 지정돼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당시 우리 농업은 풍전등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위기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태동해 쌀을 비롯하여 쇠고기·삼겹살 등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게 주도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우리 농업이 뚜렷한 대책 없이 거친 광야로 내몰렸던 때다.

당시 농업인은 300여만 명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말에는 234만 명으로 줄어 들었다. 우리 지역 농업인도 당시에 비해 반으로 줄었으며, 이 가운데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은 겨우 1%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농업 위기에 맞서 정부에서는 규모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회사사 영농조합에 수도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융자하였으나 대다수가 건설하지 못해 건물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영세한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큰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들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공익 직불금과 농민 수당, 농업 바우처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나섰으나 농업 보조금 비율은 아직도 농업 총생산액 대비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지하다시피 농업에서 비교우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다수 국가가 아직도 농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업인들도 농업의 구조 개편과 시대적인 상황에 적응하면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여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중·EU·칠레 등 5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매년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을 조성하여 농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재 1293억 원만 조성된 상황이다.

정부가 농업 재원 확충을 미루는 동안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평균 농가 소득을 4503만 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도시가구 소득의 65%를 밑도는 수치다. 더욱이 농가의 모든 농업 경영 활동에서 얻은 소득의 합인 농업 소득은 1182만 원으

로 20년 전이나 변함이 거의 없다. 더욱이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23%를 넘지 못하고 식량 자급률 또한 45.8%로 매년 농산물 수입액이 거의 40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 예산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 총예산의 3.6%였으나 내년에는 2.8%대로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농민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초 닥친 흑한으로 과일나무가 고사한 데 이어 양파와 대파, 고추 가격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나주배 작황 부진에 이어 지난 7월 초 장흥군 등 남부 지역이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상 기후 때문에 농사 환경은 이처할 매년 악화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농업인과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미국의 투자 귀재인 짐 로저스는 미래 투자 가치가 유망한 곳이 농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우선 젊은 후계농들이 꾸준히 농업에 진출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과 스마트벨리의 건립 등 농업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치유 농업 활성화도 정착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농업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크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 모든 농민이 희망과 미래를 기억하는 '농업인의 날'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